

김승희 의원 "고무줄 재건축 규제, 사회혼란 막아야"…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2018.02.27 11:22:17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재건축 규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국민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연한과 안전성 평가기준을 고무줄로 만들어, 국민들이 일관성 없는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규정이 아닌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재건축 관련 핵심규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행령 및 고시로 되어 있어 정부 정책기조와 정치적 접근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며 "정책이 자꾸 조변석개 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건축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정부가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노후건축물의 안전문제와 주민생활 불편을 도외시하는 정책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도 목표"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재건축을 부동산경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민다운 생활권리를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진설계 기준이 없거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신속하게 재건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oo47@newsis.com